

조국 정국은 '진행중'...文대통령 선택에 정국 냉각 '가능성'

靑 조국 후보자 임명 여부 결정 앞두고 정치권에 암운

임명 강행시 대치 정국 '불가피'...진영간 대결로 비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지만 이번 주 청와대의 결정으로 정국이 더욱 냉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국회에 6일까지 조 후보자를 비롯한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부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7일부터 임명이 가능하게 됐다. 말 그대로 6일까지는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7일부터는 '대통령의 시간'이 된 셈이다.

정치권에선 조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더불어 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 적극 관정을 내렸지만 정의당을 제외한 야권은 일제히 부적격 후보로 결론

을 냈다. 특히, 야권은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정국의 향배가 판가름 나는 셈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간 상태라고 한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 임명에 아직은 신중한 모양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임명은 문 대통령이 말할 사항이기 때문에 추측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대통령도 임명과 관련해 생각중일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이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들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임명에 다소 부담감이 생겼지만 정권의 사법개혁을 상징하는 조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국정 동력은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임명 기류에는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여론 추이 등을 지켜본 후 8일이나 9일쯤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처럼 청와대의 결정이 임박하자 정치권에는 암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여야는 휴일인 전날에도 조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맞붙으면서 험난한 대치정국을 예고했다. 당장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제각각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

특히, 어느 때보다 대치 정국이 가팔라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번 주 추석 연휴가 있어 여야 모두 밥상머리 민심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그 뿐만 아니라 조 장관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대형총동원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 임명의 당 위성을 설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됐다고 주장하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선 조속한 조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동시에 검찰 때리기를 강화하면서 사법개혁의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으며 야권의 조 후보자 비판에는 정치공세로 규정하면서 철물방어를 지엄하고 있다.

이에 맞서 정의당을 제외한 야권은 정부여당에 지명철회를 촉구하면서 '정국 경색'에 경고를 동시에 내비치는 등 대야공세에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우장외투를 비롯해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 카드를 만지작 거릴 가능성도 있다.

조국 후보자 문제는 이미 진영간 대결로 비화했다. 게다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총동원 만큼 여야 모두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가 엮인다. 조국 정국은 끝이 아니고 진행형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태경 "박지원, 정치공작 근절 위해 표창장 전달자 공개하라"

"누군가 정치공작 위해 사진 흘려...불명에 쓰게 될 것"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 딸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공개하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조 후보자 딸의 동양

대 표창장 사진과 관련해 "본인의 명예를 지키고 정치공작 근절을 위해서라도 사진 전달자를 공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9단 박지원 의원이 난감한 처지에 몰렸다. 인사청문회에서 공개된 동양대 컬러 표창장이 검찰에서 유출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오늘(8일) 이 표창장이 검찰은 물론 조 후보자 딸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한 발 물러섰다"면서 "이 딸이 사실이라면 누군가가 정치공작을 위해 박 의원에게 사진을 흘렸다는 게 된

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 말처럼 조국 후보자나 딸에게 직접 전달받지 않았다고 하지만 간접적으로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박 의원은 누가 이 표창장 사진을 전달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박 의원은 청문회에서 표창장 사진을 공개하며 '이게 문제다. 후보자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검찰에 압수수색 된 표창장이 검찰에도 들어와 있다'고 자료출처가 검찰일 수도 있다는 암시를 했다"고 말했다.

또 "조 후보자는 이 컬러 표창장 사진을 밖으로 유출한 적 없다고 말해 검찰유출설을 부추겼다"며 "박 의원이 검찰을 음해하는 정치공작에 이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반대 49% vs 찬성 37%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49%로 찬성 여론과의 격차가 두 자릿수인 것으로 8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가 KBS '일요일은 라이브' 의뢰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후인 7일 하루동안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조 후보자 임명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49%인 것으로 조사됐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7%였고 '모르겠다'는 14%였다. 지난 6일 열린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7일 자정에 끝났으나 그 직후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불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진보층에서는 임명 찬성 66%로 반대(26%)보다 우세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임명 반대가 75%로 찬성(14%)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중도층에서는 반대 응답이 52%로 찬성(27%)보다 우세했다.

청문회로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해소됐다는 설문에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59%로, '해소됐다' 응답률 33%보다 높았다. '모르겠다'는 답변은 8%였다.

조 후보자가 임명된 후 현재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질지에 대한 설문에는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률이 49%로 '공정할 것'이라고 답한 36%보다 우세했다. '모르겠다'라고 답한 비율은 15%였다.

이번 조사는 웹 조사(휴대전화 등 활용)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조사요청 대비 12.4%, 조사참여 대비 90.8%다.

뉴스1

박지원 "청문회 공개 표창장, 조국·딸·검찰서 입수한 것 아냐"

"입수경위, 의정활동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어"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8일 "조국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조 후보자 딸 표창장을 입수했다"며 "후보자나 따님 또는 검찰에서 입

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많은 기자분들과 문자 등으로 제가 '조국 인사청문회' 때 제

시한 표창장 사진에 대한 문의가 쇄도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박 의원은 "(표창장을) 청문회장에서 의정활동 일환으로 질문하고 공개했다"며 "(청문회에서) '후보자와 따님, 검찰에서 압수수

색해 가지고 있는 사진을 저도 가지고 있다. 진위 문제가 제기되고 야당에서 공개를 요구하는바 공개 용의는?'이라고 질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진자료의 입수경위를 묻지만 의정활동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고 확실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므로,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소득계층	5분위	4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
고소득층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저소득층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약속해주세요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칙의 안전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임박해 되었습니다.
장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